

‘퇴원’ 이재명, 보궐선거 유세 지원… 당무 복귀 초읽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어제 병원 이송 21일만에… 당분간 집에서 회복 치료 예정 당내 화합 메시지·내년 총선 승리 청사진·최고위원 인선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퇴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참석하면서 당무 복귀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불거진 당내 분열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과 결집을 이끌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4시47분께 녹색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으로 강서구 집중 유세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유세차 연단에 올라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달라”면서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증명해줄 것으로 믿는다. 감사하다”고 발언을 마쳤다.

지난 8월 31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퇴원은 21일 만이다. 당초 이 대표는 전날 진 후보 유세에 동참하려 했으나 의료진 만류로 일정을 취소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집에서 회복 치료를 할 예정인 만큼 당장 여의도 복귀는 힘들겠지만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입원 중 틈틈이 당의 상황을 보고받으며, 당무 복귀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대표가 가장 숙고하는 대목은 당의 통합 방안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국면에서 극심해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을 극복하는 게 급선무다. 실제로 강성 진명계는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그림은 살이 되지 않는다”며 “가결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무기명으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일일이 색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는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헌법상 국회의원에겐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당화 논란을 부르는 등 후폭풍마저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해 당이 한숨을 돌린 상황에서 굳이 징계 카드를 꺼내 당내 파열음을 한껏 키우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국회에 복귀하면 비명계를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세하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당무복귀와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연스럽게 당의 단합을 당부하는 의미를 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물러나 뒤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계파 안배 등을 고려해 다시금 비명계를 최고위원으로 선택하면 이는 더욱 선명한 ‘통합’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사퇴 등을 압박하는 구성원에게는 다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MBN에 출연,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6일 SBS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당 대표 사퇴하라’, ‘분당해야 된다’, ‘사당화되고 있다’는 등의 비판만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한다”며 “그런 것들이 정당한 당무집행을 방해하게 됐을 때에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통합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당장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단일 대오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 단호하게 칼을 뿜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비명 진영에선 이 대표가 직접 칼을 들지는 않겠지만 강성 친명 의원들이 전면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보다 강하고 구체적인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당의 결집을 이끌 수 있다”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내 갈등이 장기화,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세종대왕 애민정신 되새겨 민생 살필 것”

여야, 한글날 논평

여야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기며 민생을 돌보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글이 위대한 것은 백성의 삶을 살피고 그 목소리를 바로 듣자 했던 세종대왕의 고귀한 마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글날을 맞은 오늘 민심의 소리를 바로 듣고 살피라는 뜻이 담긴 한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시 되새겨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겨 민생을 살피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쉬운 글자로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을 마음껏 펼칠길 바랐던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겨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글인 만큼, 우리 정치권도 ‘막말’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되던, 육성과 역지가 아닌 겸손과 배려로 정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며 “바른말과 품격,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수입쌀 국산 둔갑 5년간 818t… 시장 교란 심각”

신정훈 “원산지 단속 철저해야”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발췌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에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에 627.2톤, ‘미표시’로 14건에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 표시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 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5년간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0건”

양향자 “8년간 200건 유출 적발”

산업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한국의희망·서구을) 국회의원이 9일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이에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고,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 (3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자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